

자산 유형에 따른 재테크 전략 중요 ‘개인형IRP·주택연금’ 활용 고려해야



‘장수 리스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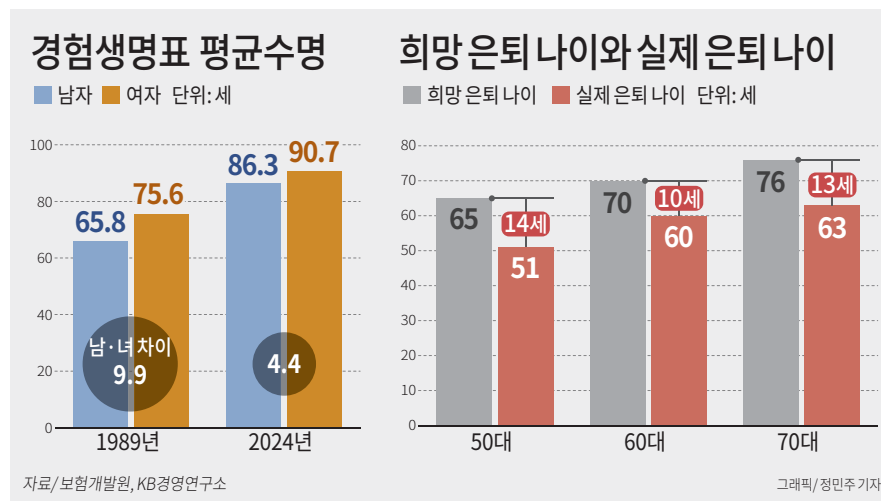
은퇴 전 국민연금 납입기간 확인
소득 여유 시 투자 등 수익 확대
주택 보유 시 유동성 확보 중요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 하면서 금융 자산 분배와 재테크를 통한 노후 준비가 중요해졌다. 기대 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 20년 이상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소득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기준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은 88.5세(남성 86.3세·여성 90.7세)다. 1989년의 70.8세(남성 65.8세·여성 75.7세)와 비교해 17.7년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서도 지난 2023년 65세를 맞은 사람의 기대 수명은 87.7세(남성 86.7세·여성 88.6세)로 추산했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약 3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은퇴 후 노후 생활은 길어졌지만, 대다수 국민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 이후 예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원(2인 가구 기준)이다. 가구주 은퇴 이전 가구 가운데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응답도 1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가운데 생활비가 충분하다는 응답



은 10.5%에 불과했다. 57%는 생활비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은퇴 가구의 생활비 중 61.4%는 퇴직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및 수혜금이 차지했고, 개인 저축·사적연금의 비중은 5.4%에 그쳤다.

은퇴 가구가 생활비의 과반을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내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는 명확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수급액은 평균 69만50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해도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출생 및 고령화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 만큼,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 촉박한 ‘은퇴 시계’

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주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보다 실제 은퇴가 빠르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KB골드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다.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5세보다 9년 빨랐다. 평균적으로 노후를 준

비하기 시작한 나이는 48세로,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했다.

예상보다 이른 은퇴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고령자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49.4%다. 이는 2014년의 40%보다 9.4%p 오른 수준으로, 같은 기간 청년 세대(15~2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인 49.5%와 비슷했다.

은퇴 후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감소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0~64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78만9000원으로, 직전 구간인 55~59세의 350만9000원과 비교해 79.4%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60대 근로자의 33.2%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고용 안정성도 낮았다. 같은 기간 50대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19.6%였다.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은 불충분한 노후 준비로 이어진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도 자금 유동성을 떨어뜨려 노후 생활을 빈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1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억1000만원을 부동산이 차지했다.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어 빈곤한 생활을 지속하는 은퇴 가구가 많은 셈이다.

◆ 불충분한 공적 보장…금융으로 보충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은퇴 전 각종 금융 자산을 축적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를 앞뒀다면 우선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납입액 대비 지급받는 금액도 더 많다. 특히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납입 우선 순위가 가장 높다.

국민연금은 실직·사업·경력단절 등 사유로 납입이 중단됐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최대 5년분까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충분하다면 65세까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기대수익률이 높고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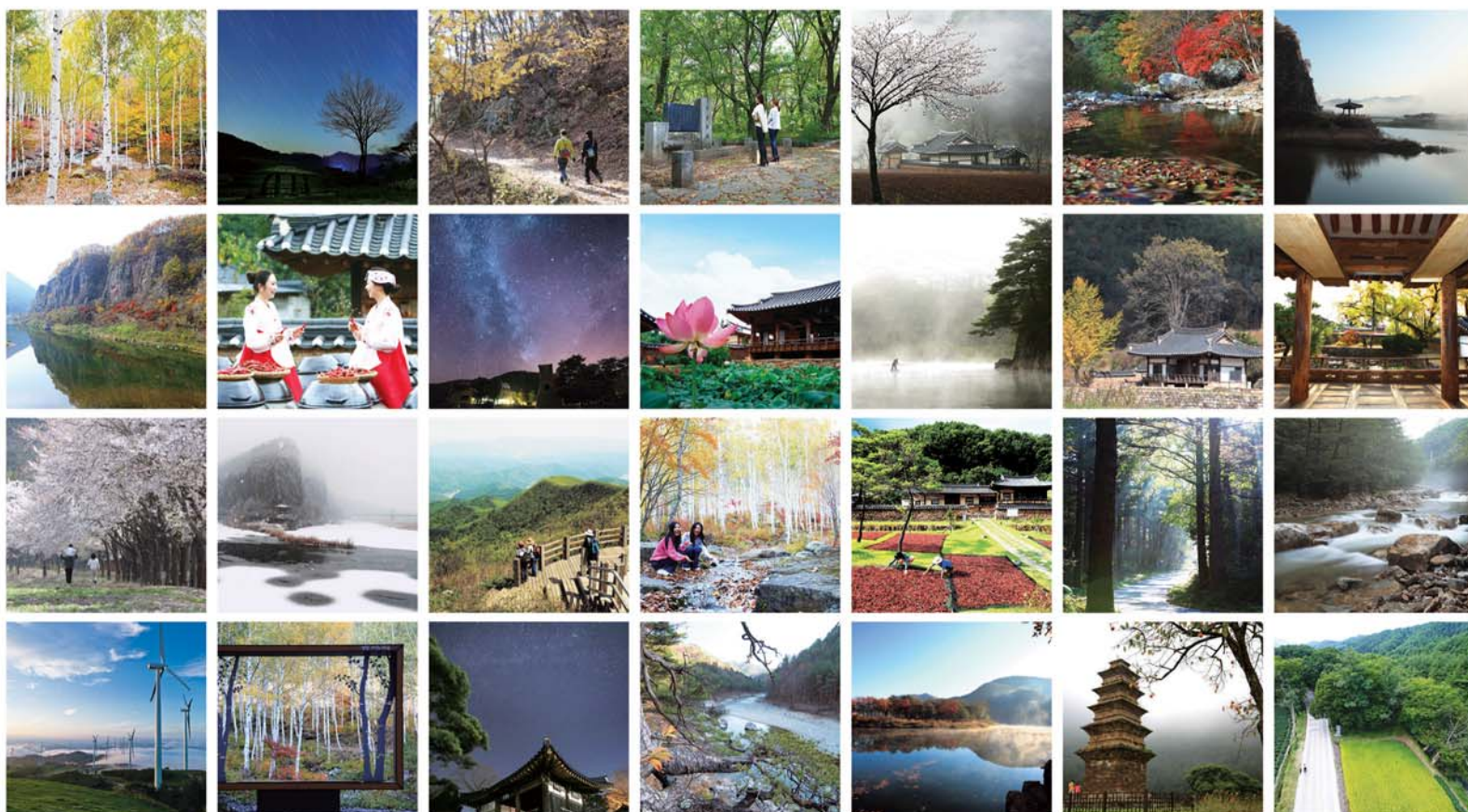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형·DB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금융자산이 불충분하지만 주택을 보유했다면 역(逆)모기지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배우자의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액을 자녀에게 일시 상속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산구조를 효율화하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고령가구가 적절한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고령 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면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주말!
영양가 있는~ 생활!

